

바람직한 건강검진 체계 구축

- 산업장 건강검진에 대하여 -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현재 산업보건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검진 제도는 한마디로 고전적인 유해물질(소음,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등) 중심의 직업성 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그의 직업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노동력 손실이 큰 새로운 질환들(예,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상당한 비중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더불어 급격한 산업화의 결과로서 이제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산업 현장의 고령화 현상은 곧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각도로 우리사회를 위협할 만큼 구체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산업보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건강검진 제도는 수진자(2002년 현재, 대략 270만명)중 5%내외 수준으로 일반질환(예, 생활습관병)을 발견하고 있으며 이른바 고전적인 직업병은 그나마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다. 전체적인 업무관련성 질환의 구성내용을 보면 이미 근골격계질환, 뇌혈관심장질환, 과로스트레스성질환이 전체의 80%를 점하고 있고 고전적인 직업병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통계치는 지금이 산업장에서의 바람직한 건강검진 체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용변적으로 설명해 주는 매우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업무상 질병의 예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근로자건강검진제도'는 관성적으로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해 온 전문가와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적 측면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제 문제해결의 방향이 단순한 건강검진 항목의 변경수준을 넘어서는, 10년, 20년 후의 산업보건을 바라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산업보건의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개편을 전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추가하여 산업현장에서의 비정규직 형태의 노동력의 증가는 고용안정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사람들의 건강보장이라는 인권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보건의료부문과의 적극적인 연계나 공공적 성격의 산업보건체계의 제공 등 수평적이고 공적인 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